



사북항쟁 당시 철로점거 농성중인 광산노동자들과 가족들의 모습. 당시를 증언하는 대부분의 사진사료들이 사건 종료 후 노동자들의 폭력으로 인한 피해상황과 사후 수습 장면에 초점을 맞춘 것에 비해 『정의구현전국사제단』이 기증한 이 사진은 항쟁 진행 중에 찍은 것으로, 그들 가운데 우뚝 선 커다란 태극기와 그들 앞을 가로지른 철로의 대비가 이채롭다. 소통을 염원했던 그들의 바람에 빗장을 지른 공권력에 대한 분노에 찬 거부를 보여주는 듯하다.

‘막장’ 과 사북항쟁

글 · 이수갑 eohsg@kdemo.or.kr

막장 드라마, 막장 국회, 막장 대법원……. 갈 데까지 간 상황을 일컫는 ‘막장’이라는 단어가 유행처럼 급속히 퍼져나가다 조관일 석탄공사 사장의 호소문으로 제동이 걸렸다. “막장은 폭력이 난무하는 곳도 아니고 불

륜이 있는 곳도 아니다”, “승고한 산업현장이자 진지한 삶의 터전이다”며 ‘막장’이라는 용어 사용을 자제해 달라는 호소문은 사회 전반에 깔려있는 ‘막장’ 분위기에 진저리를 치던 많은 이들의 호응을 얻었다.

원래 ‘막장’이란 갱도의 막다른 곳을 일컫는 말이다. 광산노동자들인 광부들은 찢질방처럼 후텁지근한 지하수 킬로미터의 막장에서 탄을 캐고 나른다. 산소마저 부족한 열악한 조건 속에서 잦은 사고와 후유증으로 그들은 늘 생명의 위협에 직면하고 있다. 지금은 상대적으로 치우가 좋아졌다지만, 1980년 4월 당시 그들의 삶은 말 그대로 막장이었다. 사북항쟁은 그런 막장 앞에 선 인생들이 자신과 가족과 동료들의 존엄을 지켜내기 위한 마지막 몸부림이었다.

1980년 초는 억압적인 유신체제의 이완과 제 2차 석유파동으로 인한 세계적 불황의 여파 등으로 그간 억눌려왔던 노동자를 비롯한 각계각층의 요구가 분출하던 이른바 ‘민주화의 봄’ 시기이다.

광산노동자들의 파업투쟁이 일어날 당시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의 동원탄좌는 국내 최대의 민영탄광으로 3,052명의 노동자가 연간 160만 톤의 석탄을 캐냈고, 하청탄광에서도 2천 여 명의 노동자들이 연간 70만 톤을 캐내 전국 채탄량의 11%를 차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들의 노동조건은 상상을 초월할 만큼 열악했다. 산업재해의 빈발과 진폐증 때문에 이들은 언제나 죽음의 공포에 시달려야 했으며, 임금은 월평균 15만 5천원의 저임금으로 당시 최저생계비인 24만원에 크게 못 미치고 있었다. 이에 더하여 전과자들의 조직인 국토개발대라든지 지역청년회 소속의 불량배나 주먹패 출신들로 이루어진 어용노조가 지부장으로 이재기를 선출하여 광산노동자들의 불만은 극에 달했다.

그리하여 1980년 4월 21일부터 24일까지 인구 3만의 탄광도시 사북에서 어용노조와 임금 소폭 인상에 항의하는 광부와 그 가족 6,000여 명이 시위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경찰과 충돌하면서 유혈사태로 발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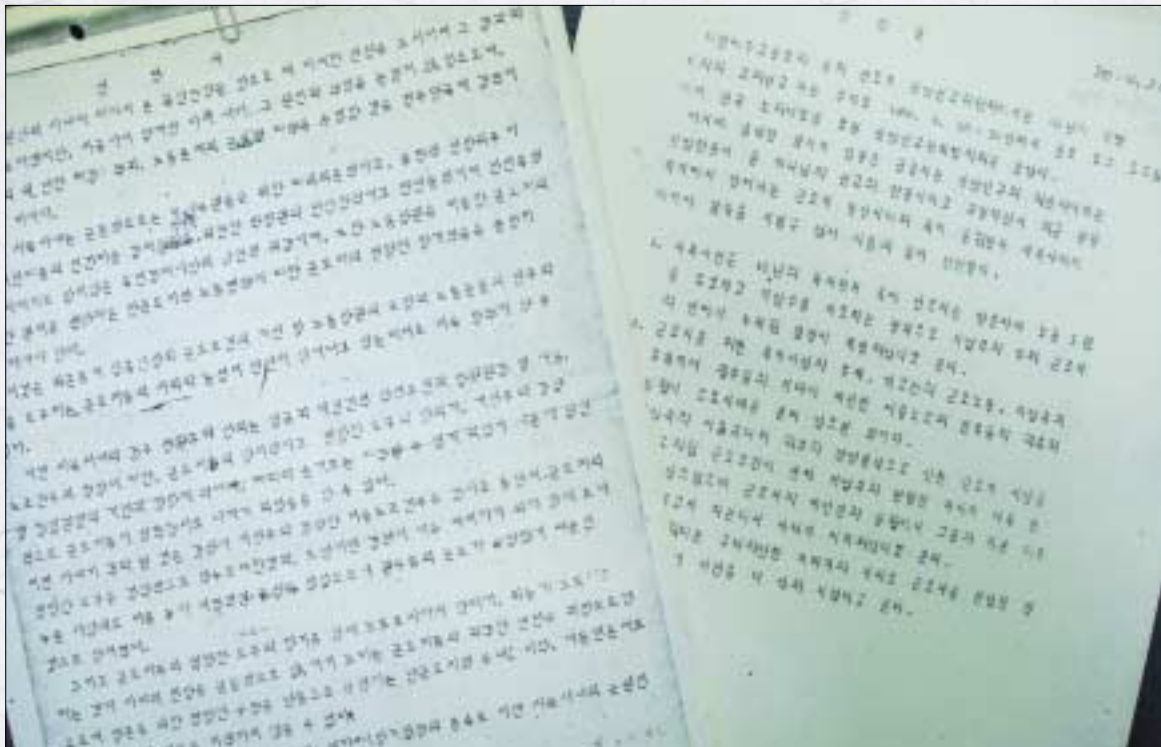
노사분규가 일어난 것은 이보다 앞선 4월 16일이었는데, 이때는 시위가 격렬하지 않았다. 광부들은 4월 18일부터 임금인상과 어용노조 지부장의 사퇴를 요구하였으나 회사 측이 요구를 들어주지 않은 채 경찰을 개입시키면서부터 유혈사태로 번져나갔다.

광부 측에서는 경찰이 어용노조와 회사 측을 두둔한다고 판단하였고 더욱이 사건의 원인을 제공한 어용노조 이재기 지부장마저 도망쳐 버리자 이후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확대되었다. 4월 21일부터 광부들은 3일 동안 사복읍 시가지를 완전 점거하여 공권력이 무력화된 상태가 지속되었으나, 광부들이 자체적으로 조직한 사수대 등이 무기고와 화약고를 통제하는 등 나름대로 질서를 유지하려는 노력이 수반되었다.

이 과정에서 경찰관 1명이 숨지고 160여 명의 경찰과 민간인이 부상을 당했으며 사복읍은 사흘 동안 광부들의 세상, 노동자들만의 도시가 되었다. 24일 노·사·정 대표가 합의에 도달, 평화적으로 해결되는 듯했다. 그러나 사태가 진정된 후 당시 계엄사령부는 합의를 깨고 5월 6일 ‘합동수사단’을 구성, 부녀자를 포함하여 31명을 구속하고 50명을 불구속 기소하는 등 총 81명을 군법회의에 송치하였다. 그들은 소요죄, 폭행죄로 구속되어 모진 고문과 2~3년의 감옥생활을 해야 했다. 당시 집권음모를 꾸미던 전두환 신군부세력은 이 사건을 ‘사회혼란상의 대표적인 사건’으로 확대, 왜곡하면서 집권의 명분으로 삼기도 했다.

민주정권이 들어선 후 사북항쟁 관련자들은 ‘사북노동항쟁 명예회복추진위원회’를 결성하고 2000년 11월 21일 명예회복과 보상을 신청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지난해 4월 23일 “1980년 ‘사북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 당시



1980년 4월 27일의 「민주주의와 민족통일을 위한 국민연합」성명서 <사북사태의 원만한 해결과 노동쟁의의 근본대책을 당국에 촉구함>과 「예장 산업선교 정책협의회」의 4월 30일자 선언문 <최근 경향각지에서 일어나는 근로자 농성사태와 동원탄좌 사북사태에 대하여>

계엄사가 저지른 인권 침해 사실을 다수 확인했다"고 진실 규명 결정을 내렸다. 진실화해위는 국가에게 피해자에 대한 사과와 함께 정신적 피해와 명예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

진실화해위의 조사에 따르면 당시 수사관들은 조사 전에 미리 주동자 명단을 작성해 '짜맞추기 수사'를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물고문과 구타를 통해 자백을 강요했으며, 50여 명의 부녀자들에 대해 강제로 옷을 벗기는 등 성적 가혹행위를 벌인 것도 확인됐다.

진실화해위는 "당시 연행됐던 임신부가 유산을 하고 일부 연행자는 이후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심각한 고문 후유증을 겪었다"고 밝혔다.

내년이면 사북항쟁 30년이 되는 이 시점, 우리 사회엔 혹 우리를 겹겹이 가로막는 막장은 없는지 살펴보아야 하지 않을까.

글 · 사료 어수갑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사료관